

서울 광화문에 모인 시민들 “헌재는 윤석열을 파면하라” “참을 만큼 참았다… 빠른 선고를”

선고기일 지정 지연에
“온 국민 분노 헌재 향해”
시민들 “빠른 선고” 촉구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지난 22일 헌재 앞, 광화문 등 서울 도심 곳곳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고 현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안국역 1번출구 앞 열린송현광장에서 탄핵 찬성 집회를 열고 현재의 탄핵 인용을 촉구했다.

참가자들은 ‘윤석열 즉각 파면’, ‘내란세력 제압하자’, ‘윤석열을 구속하라’가 쓰인 피켓을 흔들며 ‘윤석열을 파면하라’ 등의 구호를 연신 외쳤다. 특히 헌재 선고기일 지정 지연으로 이날 구호에는 ‘참을 만큼 참았다’ 등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내용이 구호도 들렸다.

김지선 촛불행동 공동대표는 “온 국민의 분노가 헌재를 향하고 있다. 참을 만큼 참았고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며 “헌재가 헌법 기준이 아닌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저울질을 하고 있어 의도적으로 선거를 지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24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도 “불법 계엄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은 내란동조범”이라며 “탄핵 기각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동십자각 일대에서 탄핵 촉구 집회를 하고 있다.

시민발언에서는 한 목사가 연사로 올라 반탄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대표목사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김종환 부천이음교회 목사는 “폭력과 분열, 극우를 동조하고 있는 전 목사를 보여 (자신을) 목사라고 소개하기도 부끄러워졌다”며 “모든 교회가 전광훈 같은 극우가 아니다. 많은 목사가 무너진 정의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후 5시부터는 ‘윤석열 즉각 파면’·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이 경북구역에서 동십자각까지 사자로 일대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집회를 마친 뒤 종로 방향으로 행진했다.

경찰에 신고한 인원은 10만명이지만 비상행동은 이날을 ‘전국 동시다발 총궐기’로 진행하고 200만명 참석을 독려했다.

부천시에 거주하는 이연지(27)씨는 “지난주에도 집회에 나왔는데 마지막

일 줄 알았다”며 “헌재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를 내리지 않아 답답한 마음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인천에서 집회를 찾았다는 강정선(46)씨도 “바로 옆에서도 탄핵 반대 집회를 하고 있다. 완전히 국론이 분열돼서 파면이 돼도 혼란일 텐데 헌재가 왜 시간을 끄는지 의문”이라며 “이 혼란이 끝나고 완전히 안정을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뉴스

전북자치도 “민생·에너지·올림픽 유치 총력”

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민생경제 활력 회복 대책회의 등 이번주 일정 발표

전북특별자치도청이 24~28일에 추진할 주요 일정을 발표했다.

김철태 전북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소방공무원 집단급식소 운영 △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 △국내 최대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가동 △청년 상인 소통협의체 발족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대응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설명했다.

△소방공무원 위한 집단급식소 운영 본격화

24일 김관영 도지사와 전북소방본부 이오숙 본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공무원 집단급식소에서 직접 직원 배식 등을 통해 소방대원의 노고를 격려한다.

도는 그동안 소방서 내에 직원 식당이 없어 불편을 겪어온 소방공무원들을 위해 집단급식소를 마련했다.

김 대변인은 “소방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돈을 모아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올해 8개 급식소(전주 완산, 정주 덕진,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완주)가 본격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그간 식사에 많은 불편을 겪었던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태 전북특별자치도 대변인은 지난 21일 오전 도청 기자실에서 24~28일에 추진할 주요 일정을 발표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 개최

오는 25일 오후 2시에는 전북자치도와 산업통상자원부, 국회 등이 함께하는 재생에너지 정책 토론회가 국회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인 이원택 국회의원과 전북자치도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토론회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내 재생

에너지 현황과 지역내 활용 방안 △RE100(재생에너지 100%) 산업단지 조성 방안, △지역사회 참여 및 공감대 형성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이번 토론회는 향후 법 개정이나 정부 정책 반영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 가동

국내 최대 규모의 연료전지 신뢰성 평가센터가 본격 가동된다. 2019년 착공된 이 센터는 전북 부안에 위치하며,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청년 상인 소통협의체 출범

27일에는 청년 상인과 도청, 유관 기관이 함께하는 ‘청년 상인 소통협의체’가 출범한다. 이를 통해 청년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맞춤형 지원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036 하계올림픽 유치 논의 본격화 전북도는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최근 선출된 신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커시트 코번트리 위원장이 기존의 바호 전 위원장의 개최지 선정 방식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전북도는 이에 맞춰 전략을 보완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2025년에 개최지 선정을 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대회 유치와 관련한 사항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 회복 위한 총력 대응 또한 전북자치도는 28일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한 3차 대책회의’를 개최한다. 김 대변인은 “도민의 삶과 직결되는 민생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만호 기자

야5당, 최상목 탄핵소추안 발의… “헌재 판결 능멸”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미임명 등 탄핵 사유
“한덕수 총리 직무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진행”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 5당이 지난 21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 이후 민주당이 발의한 30번째 탄핵소추안이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춘생 조국혁신당·윤종호 진보당·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를 찾아 ‘기

획재정부 장관 최상목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최 대행은 지난달 27일 헌법재판소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것이 위헌이다, 국회 권한을 침해했다’는 전일 일치 판결이 있었음에도 아직까지 따르지 않고 있다”며 “헌재법에 따르면 권한쟁의 심판이 인용됐을 경우 그 취지에 따라 구체적으로 처분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법마저 무시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헌재, 법원의 판단을 행정부가 대놓고 무시하고 헌재를 능멸하고 있는 행위에 대해 국회가 이를 바로잡기 위해 탄핵안을 제출했다. 현재의 판결을 능멸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능멸하는 것이고 매우 엄중한 사안이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대행에 대한 4가지 탄핵 사유로 ▲12·3 비상계엄 내란 공범 행위 ▲권한쟁의 심판·헌재 판결 이후에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미임명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미임명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회 절차 미이행 등을 꼽았다.

최 대행 탄핵안의 키를 쥐고 있던 민주당은 그간 ‘줄탄핵’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의견을 청취하며 고심을 거듭해왔다. 24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각’ 등을 받아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 대행 탄핵이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탄핵 추진 여부를 위임 받은 지도부가 탄핵소추를 최종 결정할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스

최 대행 탄핵안의 키를 쥐고 있던 민주당은 그간 ‘줄탄핵’ 여론 역풍을 우려하는 당내 의견을 청취하며 고심을 거듭해왔다. 24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둔 한덕수 국무총리가 ‘기각’ 등을 받아 직무에 복귀할 경우 최 대행 탄핵이 실익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탄핵 추진 여부를 위임 받은 지도부가 탄핵소추를 최종 결정할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 지난 21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주요 각 실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보고회’를 열고,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상황을 점검하며 확보 전략을 논의하고 있다.

“문화도시 전주, 문화한국 2035과 연계 지원을”

민주 이성운 의원, 국회 법사위서 유인촌 문체부장관에



더불어민주당 민주 이성운 의원(전주)은 지난 1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주 문화 발전과 2036년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성운 의원은 지난 6일 문체부가 발표한 ‘문화한국 2035’ 계획을 언급하며 “핵심과제를 중 지역 문화 균형 발전이 포함된 것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지난해 선정된 문화도시 전주가 광역형 선도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전북·전주가 2036하계올림픽 국내 후보지로 확정되고 “문화올림픽을 테마로 유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문화한국 2035 정책이 하계올림픽 유치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 장관은 “열심히 준비 잘 하겠다”며 화답했다.

/이만호 기자

청년농업인 정책 진단·발전 방안

오은미 도의원, 제1차 청년농업인 정책토론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오은미 의원(순창·진보당)이 지난 20일 도의회 의원총회 의실에서 ‘청년 농업인 정책 진단·발전 방안’을 주제로 제1차 청년농업인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이수미 부소장과 (전)전북자치도 4·H연합회 이지훈 회장의 발제에 이어 오은미 의원의 사회로 전북자치도 4·H연합회 이강훈 회장, 더불어민주당 전북농어민위원회 김주주 부위원장, 전북연구원 배균기 책임연구원,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 최재용 국장의 토론이 이어졌다.

발제를 맡은 이수미 부소장은 “정부의 청년농 지원 정책 중 스마트팜 지원사업은 초기 높은 투자비용과 유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청년농업인 10명 중 6명 가량이 스마트팜 참여를 포기하고 있다”며, “정부가 청년농민 ‘육성’에만 집중하고 사후 대책은 부실해 청년들은 오히려 수천~수억 원의 빚더미에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지역민과 새로 들어온 청년들이 함께 지역 농지 문제를 시작으로 농업은 물론 농촌의 미래상을 만들어 가도록 연계하는 사업에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람농지 플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지역과 함께하는 청년농 정책”을 강조했다.

익산 지역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이지훈 회장은 “청년농업인이 영농 활동을 하면서 겪는 어려움 중 무엇보다 주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해

결적으로 금융권의 평가 기준을 개선하고, 농업인 전용 대출 상품 도입, 다양한 형태의 주택공급 확대, 지자체의 전세금 및 이자지원 등 지원 프로그램 확대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로 나선 배균기 책임연구원은 “현재 청년농업인 정책을 교육연수 중심, 지역단위 현장중심형 육성 정책으로 전환해야 하며, 특히 청년농의 농업경영·농촌생활 자립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청년창업농 멘토 학교, 모니터링 및 컨설팅 지원, 경영희생자 지원 프로그램운영, 청년창업농 인센티브 지원 등의 사업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만호 기자

군산시의회, 군산해수청과
군산항·새만금신항 현안 논의

군산시의회(의장 김우민)는 지난 21일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해 류승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장을 면담하고 군산새만금신항과 군산항의 원포트 운영 효율화와 군산항의 준설도 문제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군산시의회는 군산항의 수심 미확보로 인해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위험과 대형 선박의 기피현상을 지적하며, 군산항의 항만 경쟁력 약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시 준설 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군산새만금신항은 군산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체항으로 추진되는 만큼 군산항과 원포트 함만으로 통합 운영되어야만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 궁극적으로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군산=이재훈 기자